



주간 통일정세

2012-4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리설주, 사격·배구경기 관전(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4·25국방체육단의 사격 경기, 번개팀과 평양팀 간의 여자배구경기를 봤다"며 "4·25국방체육단 야외사격장과 새로 꾸려진 체육관도 돌아봤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체육강국에 올려세우는 것은 국력을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기상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고 "체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승산 종목에 힘을 넣으며 국내연맹전을 조직해 체육단 사이의 경쟁 열풍이 더 세차게 타 번지게 해야 한다"고 말함.

- **北,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 강화(11/9,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9일 북한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부귀영화: 우리식 경제부흥의 방도 5'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서)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질서가 세워지고 적절한 방법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철저히 내각과 협의하여 풀어나가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이 신문은 북한 매체들이 경제단위를 시찰하는 최영림 내각총리의 행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각급 당 위원회에서는 내각과 각급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제사업의 담당자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내세워주고 떼밀어주고 있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11/5, 김정은 黨 제1비서, 용성과 서포·역포지구 등 수도의 살림집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1.5,중방)
- 11/7,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 '선물' 전달 모임, 11.6 최태복(黨 비서) 등 참가下 진행(11.7,중방)
- 11/8, 김정은 黨 제1비서, 11.7 창광·경상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왕밤' 전달(11.8,중통)
 - 김정은, 강계시 김일성 父子 동상 건설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11.8,평방)
- 11/8, 김정은 黨 제1비서, 임업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생일상 전달(11.8,평방)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라오스 주석 및 시리아 대통령 등의 '黨 창건' 67돌 축하전문에 답전(11.9,중통)
- 11/10, 김정은 黨 제1비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육해운성 청진대리사무소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11.10,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 11.5 라오스-조선친선협회 대표단과 담화(11.5,중통)
- 최영림 총리, 대동강자라공장 능력확장공사 현지 요해(11.6,중통·중방)
 - 이에 앞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과일생산·보관·판매실태를 요해했으며,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수경온실의 겨울철 생산 정상화 대책을 협의했음.
- 최영림 총리, 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의 대규모 축산기지 건축 현장 점검(11.9,중통·중방)

나. 경제

● **북한에도 전자화폐 등장(11/6,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외화에 이어 북한 원화 전용의 전자화폐를 도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북중 무역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외화 전용 전자화폐는 이전부터 사용됐고, 10월에는 북한 원화 전용 전자화폐가 배포됐으며 북한 원화 전용 전자화폐는 이달 들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함.
- 북한 원화 전용 전자화폐는 급여와 연동될 뿐만 아니라 배급 관련 정보도 기록되는데 현금카드 형식인지, 신용카드 형식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힘.
- 이어, 전자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으며, 사용 지역은 평양으로 한정됐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상수관 작동 불가…주민들 펌프나 우물물 마셔(11/5, 연합뉴스)**
 - 북한은 시설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상수관 시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지방 주민들이 식수를 펌프 물이나 우물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5일 보도함.
 -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평원군의 전체 가구 수는 모두 4만7천 가구였지만 상수원 시설 사용 가구는 8만9천792 가구로 거의 배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두 가지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北주민, 쌀 음식으로 식량난 대처(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때문에 가격이 싼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세계식량계획(WFP)이 벌인 설문조사를 인용하여 8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벌인 설문조사에서 '가격이 싼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방송은 '친구나 친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식량을 줄였다, 끼니를 거른 적이 많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 **北, 내년 쌀·옥수수 440만t 확보 전망(11/9,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에 440만t의 쌀과 옥수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180만t의 쌀을 생산하고 내년 추수 전까지 30만t의 쌀을 수입해 총 210만t의 쌀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10만t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함.
 - FAO는 또 내년 북한의 옥수수 확보량을 올해 생산분 210만t, 수입분 20만t 등 총 230만t 정도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 1명이 내년에 소비하는 쌀과 옥수수의 양은 각각 74.4kg, 80.3kg으로 올해(쌀 72.2kg, 옥수수 68.3kg)에 비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北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롤러스케이트장 준공(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의 대동강 기슭에 주민편의시설인 류경원, 인민 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이 준공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류경원은 목욕, 이발, 미용, 안마, 치료 체육 등의 서비스를 하는 문화복지시설로, 연건축면적이 1만8천379㎡이고 하루에 7천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함.
 -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문경덕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고 최 총리는 준공사에서 "류경원과 인민 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트장)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전국적으로 낱알 털기 실적 60% 완수(11.10,중방)
- △성천군,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물증산투쟁, △자강도, 태양열 남새온실 건설추진, △과수연합총회사, 과수업 과학화 현대화 추진, △2.8비날론연합기업소, 생산정상화 주력, △순천화학기업소, 통합자동화체계 실현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시리아 경제특구 '협조 양해문'(종합)(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시리아는 5일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밝힘.
 - 이 통신은 이날 양국의 정부 대표단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특수경제지대와 자유지대에서의 호상협조(상호협조)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했다고 보도했으며, '특수경제지대'는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등의 경제특구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과 시리아가 경제특구에 대한 시리아의 투자 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보임.
 - 또 북한과 시리아는 환경보호에 관한 협조 양해문을 체결했고 농업과학 연구의 협조·교류 합의서, 2012~2015년 정보봉사(서비스) 집행계획서, 관광협조 이행을 위한 집행계획서 등에도 서명함.
- 北中, 평양에 종합 자동차 생산단지 조성(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단둥(丹東)의 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중조변경무역)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고문에서 북한이 중국과 공동으로 총 36만㎡ 부지, 건축 면적 1만1천800㎡의 종합 자동차 조립 생산 단지를 평양에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6일 전함.
 - 중조변경무역은 2009년 9월 북한의 수도여객운수지도국과 평양에 평운중성합영회사 차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해부터 '평양자동차'라는 등록상표를 이용해 버스와 화물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 3월18일 개장을 목표로 2천500㎡ 넓이의 매장에 대형 전시장을 갖춘 자동차 부품도매 상가도 만들고 있다고 밝힘.
- 獨단체, 北에 3년간 유기농법 전수(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의 민간단체인 유기농연구소(FiBL)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 친환경 농법을 전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연구소의 비아테 후버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이 지원한 50만 유로를



- 이용해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을 북한에 전수하고 있다"며 "북한의 농업 지도자 약 20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구소는 북한의 농업연구소와 함께 약 30ha 규모의 농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고, 독일에서 파견한 연구원 5명이 북한 농업과학원 산하 유기조사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 품종을 개량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후버 대변인은 "유기농법 전수와는 별개로 EU 원조협력청에 축산업 분야의 기술지원을 위한 대북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결정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노동당, 中당대회에 축전... "북중친선 강화"(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7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해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가 당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고 강조함.

● **北日회담 15~16일 몽골서 개최(종합)(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회담이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이 통신은 9일 "2012년 8월 조일(북일) 사이의 외무성 과장급 접촉에 이어 쌍방 합의에 따라 11월15일과 16일 몽골 울란바따르(울란바토르)에서 정부 간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며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 회담에는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와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국장급 회담의 의제에 남북자 문제를 포함하기를 원하지만 북한이 남북자 문제의 의제화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함.

● **北매체, 오바마 美대통령 재선 보도(11/10,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 북한 매체들은 10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논평 없이 보도함.
- 북한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보도는 대선 결과가 발표되고 사흘 만에 나온 것임.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



송은 이날 "미국에서 6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결과 민주당 후보인 현 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 공화당 후보인 밋 롬니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당선)됐다"고 전함.

- 북한 매체들은 "오바마가 내년 1월 정식 취임하게 된다"면서도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음.

● **오바마, 북미대화 역사 총괄해야(11/10,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미(북미) 대화의 역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재선된 오바마가 맞이할 결단의 국면' 제목의 '시론'에서 "조선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조미회담 역사에 대한 총화(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함.
- 또한, 지난 7월과 8월 북한이 각각 발표한 외무성 성명과 외무성 비망록을 거론하며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 정권이 조선과 어렵게 이루게 된 합의를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20년간에 걸친 조미 비핵화 대화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은 20년 전에 채택된 조미공동성명(북미 공동 코뮌니케)에서 핵무기 불사용과 핵위협 포기,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조선의 평화통일 지지를 약속했었다"며 "조선이 이제껏 주장하는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함.
- 조선신보는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지,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해 북한의 핵무기고가 계속 늘어나게 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함.

● **오라스콤, 北통신사업에 1억5천만달러 투자(11/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2008년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지금까지 총 1억5천만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방송은 중동의 한 경제전문 웹사이트를 인용해 "오라스콤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억5천300만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북한 내 통신망 구축 사업에 자금의 대부분이 쓰였다"고 설명함.
- 지난 2008년 오라스콤은 앞으로 3년간 총 4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고, 북한 체신성과 함께 '고려링크'를 설립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이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입주기업이 기존 8개사에서 9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힘.
- 9개사에 부과한 세금 총액은 16만 달러이며, 9개사 가운데 1개사가 최근 400달러의 세금을 내 북측의 요구대로 세금을 납부한 입주기업은 2개사(1만7천400달러)로 늘어났다고 전함.

● **北서 회견한 김광혁 가족, 탈북자로 확인(종합)(11/9, 연합뉴스)**

-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재입북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김광혁-고정남 부부가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9일 "전날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광혁 가족은 회견 영상과 여러 정황 등으로 볼 때 국내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김광혁은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부인 고정남과 남한에서 태어난 두 살짜리 아이들을 대동한 채 중국 선양을 통해 9월12일 재입북했다고 전날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장함.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광혁-고정남 부부와 아들 김세한 등 세 사람이 지난 9월 초 중국으로 출국해서 북한으로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1.8)]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공약(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국가안보실 신설, 북인권법 제정 등) 관련 "이○○역도의 대북정책보다 더 위험천만한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전면대결·전쟁공약"이라 비난(11.8, 중통·중방·평방)
- 韓美 연합사 설립(1978.11.7) 34주년 관련 '韓美당국이 '전작권' 전환의 간관 밑에 새로운 북침합동작전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新북침전쟁기구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비난하며 '지체없는 해체' 주장(11.8, 중방·노동신문/새로운 북침전쟁기구 조작용 노리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미·북 관계

- "美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韓 대선에 달려"(11/8, 연합뉴스)
 - 미국의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평화재단이 서울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동북아 지역협력' 주제의 포럼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던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시도된 2·29합의가 실패하면서 미국은 더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황 교수는 "대체로 미국 내에서는 북핵협상의 장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대신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봄.
 - 그는 또 "현재 미국 내에서는 어떤 대북정책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느라 한동안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황 교수는 한국의 대선과 관련,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새 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북핵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며 고민하는 미국 차기 정부와 새로운 대북정책에 의욕을 보이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미관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는 차기 중국 지도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는 또 다른 시간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반적 정서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경제제재 움직임에는 '소극적 동참'을 선택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내다봄.

나. 중·북 관계

- "北中, 평양에 종합 자동차 생산단지 조성"(11/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평양에 종합 자동차 조립 생산 단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단둥(丹東)의 중조변경무역유한공사(중조변경무역)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고문에서 북한이 중국과 공동으로 총 36만㎡ 부지, 건축 면적 1만1천800㎡의 종합 자동차 조립 생산 단지를 평양에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중조변경무역은 2009년 9월 북한의 수도여객운수지도국과 평양에 평운중성합영회사 차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지난해부터 '평양자동차'라는 등록상표를 이용해 버스와 화물차를 생산하고 있음. 중조변경무역은 또 내년 3월18일 개장을 목표로 2천500㎡ 넓이의 매장에 대형 전시장을 갖춘 자동차 부품 도매 상가도 만들고 있음.
- 북한에서는 통일교 계열인 '평화자동차'도 2002년 남포에 공장을 열고 '선주문 후생산'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해 1천360대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전해짐.

● "北 황금평경제특구 중국 투자유치 실패"(11/6, 연합뉴스)

- 북한이 난파 직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립한 황금평 경제특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움직임은 외로운 농부와 그의 달구지뿐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은 1년 전부터 북한의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빈부격차밖에 없음. 북한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6만~7만 명의 주민들은 노동력을 팔기 위해 가난한 조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음.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접경한 14km² 넓이의 황금평은 북한 4대 경제특구의 하나로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제조업 생산기지를 만들려고 설립한 것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해 6월7일 양국 고위층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착공식까지 거행함. 그러나 황금평은 현재 조그마한 섬일 뿐임.
- 중국 투자자들은 20여년 전 핵무기 개발 야욕에 따른 국제 제재와 국가경영 오류로 인한 식량난으로 경제가 파탄해져 버린 북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음.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무역업자인 정치위이는 "북한은 사업의 여지가 넓어 투자를 하고 싶지만 정책이 불안정해서 감히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랴오닝(遼寧)성에 사는 제 친구가 북한에 2억4천만 위안(4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쫓겨났다"면서 "이런 경험은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고 말함.
-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으로 인해 권력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권유를 무시하고 개혁을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말함.

● <中연변, 北관광 '신흥 거점' 부상>(11/7,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연변 지역이 북한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7일 중국 연변일보에 따르면 올해 연변에서 자가용, 열차, 유람선,



전세기 등을 이용해 북한을 관광하는 다양한 코스가 열리면서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음.

-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북한 나선시에 도착한 뒤 유람선을 이용해 금강산을 관광하는 상품은 지난 6월 말 출시된 이후 2개월 만에 4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함. 이 상품은 1인당 요금이 3천300~3천800위안(58만~67만원)으로 중국에서 인기 있는 태국 단체관광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매회 관광단을 모집할 때마다 만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짐. 훈춘-북한 나진-러시아 하산을 육로로 연결하는 3국 무비자관광은 지난 4월 개통한 뒤 현재까지 46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됨.
- 지난 5월에는 북·중 관광철도 노선으로는 처음 개통된 연변주 투먼(圖們)-북한 칠보산 관광열차가 운행을 시작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500여명이 이용함. 연변주 연지(延吉)-평양 관광 전세기는 지난 7월 운행을 개시한 뒤 현재까지 왕복 32차례 운항했는데 관광객이 몰려 항공편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함. 연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중국인이 자가용을 타고 훈춘에서 출발해 북한 나선 지역을 둘러보는 자가용 관광코스도 열려 호응을 얻고 있음.
- 그동안 북한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이용함.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은 중국의 변경도시 가운데 평양, 개성, 판문점, 금강산, 묘향산 등까지 이동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임. 중국 관광업계는 최근 연변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북한 관광코스가 새로 뚫리면서 연변과 북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연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백두산에 대해서도 북한 쪽 지역의 관광 개발 사업을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北노동당, 中당대회에 축전... "북중친선 강화"(11/8,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7일 보낸 축전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해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가 당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동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적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회가 원만한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고 강조함.
-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는 8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선출될 예정임.



다. 일·북 관계

● "北日, 국장급 본회담 15일 개최 추진"〈교도〉(11/9,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오는 15일부터 제3국에서 국장급 본회담을 열기 위한 협의를 9일 시작했다고 양국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함. 일본은 이틀간 이어질 이번 회담에서 양국 협의 대상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함.
- 이번 회담에는 북한에서 송일호 외무성 북일 교섭 담당대사와 일본에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임.
- 북한과 일본은 지난 8월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 과장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이는 4년 만에 열리는 정부 간 협의였음. 당시 북한과 일본은 상호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함.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측의 관심사이므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함.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올라온다면 북한이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요코타 메구미 씨를 포함해 일본인 납북자들의 근황을 조사해달라고 북한 측에 요구할 방침임.

● 〈北日회담 중국 아닌 몽골서 개최 눈길〉(11/11, 연합뉴스)

- 오는 15-16일 열릴 북한과 일본간 국장급 회담이 중국이 아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음. 통상적으로 북일회담은 중국에서 열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 이번 회담이 열리는 때가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기여서 중국이 아닌 몽골이 회담 장소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선 나오고 있음. 한 소식통은 11일 "베이징에서 당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기자들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조용히 회담을 하려는 취지를 살려 몽골로 잡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몽골에서는 지난 3월 북한 외무성의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가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裕) 전 납치문제 담당상을 대리하는 일본 학자를 만나 일본인 처의 모국 방문을 비롯한 현안을 협의한 바 있음. 차히야 엘베크르지 몽골 대통령이 지난 9월 북한 김정일의 경제개혁을 돕겠다고 말하는 등 북한과 몽골간의 관계가 돈독한 점도 회담 장소 선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그러나 소식통들은 회담 장소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전함. 한편 납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참여한 입장차를 고려하면 북일간에 이번 회담을 통한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북일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일간의 현안들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데다가 북한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정부와 중요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함.
-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2008년의 납치문제 재조사 약속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북한은 납치 문제의 의제화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본인 유골 반환과 일본인 처 고향 방문 등을 내세워 만경봉호 운항 재개, 북한 인사의 방일 허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됨.

라. 러·북 관계

● 탈북자 부부 또 재입북... "남생활에 환멸" (11/8, 연합뉴스)

- 남한에서 생활하던 탈북자 부부가 북한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힘. 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북한에 돌아온 탈북자 김광혁-고정남 부부가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을 했다고 전했고 조선중앙TV도 이날 저녁 이 부부의 기자회견 장면을 방송함.
- 북한이 올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탈북자가 재 입북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6월28일 박정숙(남한에서는 박인숙으로 활동)씨에 이어 두 번째임. 지난 7월 김일성 동상을 파괴하려다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전영철씨까지 포함하면 탈북자 출신의 기자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임.
- 중앙통신은 "김광혁은 2008년 3월, 고정남은 2008년 9월 중국으로 비법월경(불법월경)하여 거간꾼들과 남조선 괴뢰 정보기관의 꼬임과 회유, 조정 밑에(아래) 남조선에 끌려갔다"며 이 부부가 남한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속은 것을 깨닫고 지난 9월12일 북한에 재 입북했다고 밝힘. 김광혁-고정남 부부는 기자회견에서 각각 탈북한 뒤 남한에서 생활하다 알게 돼 2009년에 결혼했다고 밝힘.
- 김씨는 북한에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중국을 거쳐 남한에 갔지만 비참한 생활로 후회했다고 밝혔고, 고씨도 "남조선(남한)은 썩고 썩은 더러운 사회였다. 가정도,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함. 북한이 재입북한 탈북자의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은 남한 생활이 힘들다고 선전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탈북을 차단하고 체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자가 남한에서 귀환하는 현상이 더 많아졌다고 보여줌으로써 체제 내부를 결속하고 남한 당국과 탈북자에게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동두천 "美기지 계획대로 평택 이전" 축구 선포식(11/7, 연합뉴스)

- 경기도 동두천시가 주춤거리는 미군기지 반환에 발 벗고 나섬. 동두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은 7일 보산동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 모여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축구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음. 오세창 동두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기관·사회단체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함.



- 이들은 선포문에서 "정부가 미2사단 포병여단과 한국군을 신연합군체제로 개편해 동두천에 계속 주둔시키려 한다"며 "계획대로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함. 이들은 이어 "정부는 평택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예산 18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 경제질서가 무너질 동두천시에도 평택시와 동등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선포문 낭독 후 보산동 사거리에서 지행역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임. 박형덕 시의장은 "살기 좋은 동두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0년간 주한미군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움직이며 '기지촌'이라는 오명도 갖게 됐지만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찬 동두천을 만들고 싶다"고 말함
- 지난 6월 미2사단 일부 부대의 잔류 논의가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구성된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임.

나. 한·일 관계

● <李대통령, 日 과거사 문제 해결 거듭 강조>(11/8,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거듭 촉구함. 이 대통령은 8일 제5차 발리 민주주의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2차 대전 중 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유린에 대해 당사국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이 '전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 원칙 증진'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의 공동 주제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임.
- 비록 연설 중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사과를 하기는커녕 점차 우경화하면서 망언을 일삼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앞서 이 대통령은 불과 두 달 전에도 '제3국'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지적함. 지난 9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설에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한 것임. 이렇게 외국에서 잇따라 일본 과거사를 언급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는 임기 중 매듭짓고 가겠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짐.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령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해마다 돌아가셔서 몇 분 남지 않은 만큼 이 문제는 시한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함. 지난 8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반성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임.



- 한편, 이 대통령은 현지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와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라고 답함. 이 대통령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것은 한국의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함.

● 日 "독도 봉우리 지명 제정, 용인못해"(11/9, 연합뉴스)

- 국토해양부가 최근 독도의 두 봉우리 지명을 '우산봉'과 '대한봉'으로 정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9일 일본 각료 회의에서 승인된 서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독도 봉우리 지명 제정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상황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 정부는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함.

다. 미·중 관계

● "중사이버공격, 미군사작전 능력 위협"〈美보고서〉(11/6, 연합뉴스)

-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미군의 준비태세와 군사 작전 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밝혀짐.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오는 14일 미국 의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 중 사이버안보 분야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기관과 해커들이 점점 더 정교한 기술로 무장하고 미군과 국방 관련 계약자들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블룸버그가 입수한 이 보고서 초안은 중국 해커들이 군사 기술 플랫폼에 설치된 센서와 조리개 등 특정한 타겟에 집중하는 등 더 진보된 양식의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해킹 능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시스템 사용자들에 대해 더욱 큰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보고서는 또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최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은 군대뿐 아니라 전력시설, 송유관, 통신 시설 등 기간산업에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은 인민해방군 부대를 포함한 군대와 민간부문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이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임.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정보관리는 중국이 미국의 정보통신 위성과 무기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교란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함.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한 경영인 모임 연설에서 사이버 공격은 2001년 '9.11 테러'에 비견될 정도로 파괴적이라고 경고함.
- 지난 2000년 미국 의회가 만든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중국의 경



제적,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권고해왔음. 위원회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부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등을 권고한 바 있음.

라. 미·일 관계

● 美日 방위지침 개정 협의…中 견제 강화(11/6,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유사시 군(軍)의 협력 방식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6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연내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음.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중국의 군비 확대와 해양 진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방위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 책정되고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1997년 개정돼, 이번에 개정될 경우 재개정이 됨. 이번 개정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와 해양 감시 강화 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규모 재해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등을 지침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초점임.
- 일본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태세가 정비되는 대로 실무급 협의를 통해 지침의 수정 항목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양국은 이르면 내년 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미일 안전보장협 의위원회(2+2 회담)'를 열어 방위협력 지침 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日, F-35 스텔스기 부품 제조 참가하기로"(11/8, 연합뉴스)

- '무기 공동 제조·수출 금지' 자기 규제를 사실상 해제한 일본이 F-35 스텔스기의 부품 제조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9일 총리와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이후 일본 기업의 스텔스기 부품 제조 참가를 허용할 방침임. 일본은 1970년대부터 외국과의 무기 공동 제조·수출을 금지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내세움.
-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우호국과의 무기 공동 제조·수출은 포괄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이 원칙을 대폭 완화함. 이후 국제적인 무기 공동 제조에 참가하는 것은 F-35기 부품 제조가 첫 사례임. 일본은 지난해 12월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하면서 미국과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 비율을 '최대 40%'로 합의함. 구체적으로는 F-35기의 동체 일부나 날개와 꼬리날개, 전자 장비 등을 만들게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함.

● 日 노다, 오바마와 조기 정상회담 추진(11/8, 연합뉴스)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버락 오



바마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함. 8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21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를 활용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하고 있음. 일본은 9월 센카쿠 국유화 이후 외교, 경제, 군사적 압력을 가중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미 동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고 심화하겠다"고 말함. 일본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센카쿠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또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 파트너였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교체할 경우 양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양국 간에는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미군 수직이착륙기 배치와 운용에 대한 오키나와의 반발,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음.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A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참여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 내 반발로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국은 재정난을 덜기 위해 일본에 주일 미군의 주둔 비용 부담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美日,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추진"(11/11, 연합뉴스)

-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함. 양국 외교·국방 실무자가 내달 초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임.
-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해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 뿐 아니라 중국이 해양에 진출하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고 인정함. 모리모토 방위상은 또 "국내법을 새로 정비하는 정치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방위협력지침 개정 후 일본 국내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함.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방위 부대신이 9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방 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와 만난 것도 방위협력지침 재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가시마 방위 부대신은 취재진에게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하지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함.
-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적어놓은 문서임. 1978년 소련의 일본 공격을 예상해 처음으로 만들었고, 1997년 한반도 유사 사태를 상정해 개정함. 일본은 1997년 방위협력을 개정한 뒤 1998년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기도 함.
- 이번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관련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낙도 방위 등에서 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ISR) 분야 협력을 증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한편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미·러 관계

● <오바마 재선>러 전문가들, 오바마 재선에 엇갈린 평가(11/7, 연합뉴스)

-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것과 관련 낙관론과 비관론을 동시에 내놓음.
- 7일(현지시간)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마르겔로프는 "오바마의 승리는 상당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며 "미국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은 항상 유리한 입지에 있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됐다"고 말함. 마르겔로프 위원장은 앞으로 오바마 2기의 대내정책과 관련, 오바마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기치로 당선됐지만 2기에서는 경제적 정의와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함.
- 대외정책에 대해선 오바마 2기가 쉽지 않은 상황과 직면하고 있다며 중동과 북(北)아프리카를 몰아친 '아랍의 봄'의 여파와 이란 핵문제, 시리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대(對) 테러전, 유럽 및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등을 예로 들음. 마르겔로프는 러-미 관계에서 오바마가 러시아를 '미국의 공적 1호'라고 규정한 밋 롬니 공화당 후보와는 달리 화해 정책을 약속했지만 미국이 구축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확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함.
- 하원 국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푸슈코프는 오바마 재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푸슈코프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선 결과는 밋 롬니 후보가 대표했던 미국 우파보수주의자들의 중요한 패배를 의미한다"면서 "이 보수주의 세력들이 미국을 조지 W 부시 시절로 되돌리려 시도했었다"고 지적함. 그는 오바마 2기의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하드파워'에만 의존하지 말 것과 공격적인 방식으로 일극체제를 복구하려 시도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하원 국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오니트 칼라슈니코프도 오바마 재선이 향후 러-미 관계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 그는 "오바마가 유럽 MD 시스템 구축 문제에서 러시아에 양보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 문제와 다른 많은 문제에서 오바마가 '소프트 파워'를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함.
- 한편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 당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는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이 고립의 길로 들어섰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음. 지리노프스키는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오바마를 선출함으로써 스스로 정체를 선택했다"며 "미국은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는 고립으로 향



하는 길의 시작"이라고 지적함.

-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림. 모스크바 전략평가연구소 소장 세르게이 오즈노비셰프는 오바마 대통령 재선이 미국 경제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고 미국의 대외 파트너들에게는 예측성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오즈노비셰프 소장은 "오바마가 더 큰 규모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했으며 상원 등의 반대에 불구, 미국 경제를 개혁하는데 성공했다"며 "현재 미국 경제는 상승기에 있으며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함. 그는 "오바마는 미국 경제를 발전시킬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의 경제 프로그램은 롬니의 프로그램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함. 오즈노비셰프는 오바마의 승리는 러시아에도 이상적인 것이라고 분석함. 그는 오바마가 긍정적이며 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바마 1기에서 미-러 양국은 상호 갈등을 대화로 극복하는데 성공했다면서 롬니가 당선됐더라면 그런 일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오바마가 지난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선이 끝나면 러시아와의 유럽 MD 협상에서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바마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함.

- 반면 미국 국방정보센터 러시아·아시아 프로그램 소장 니콜라이 즐로빈은 오바마 재선 이후 미-러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라 비관적 전망을 밝힘. 그는 양국 관계 향상을 위한 잠재력은 이미 고갈됐으며 오바마 1기에서 러시아와의 '리셋(reset:관계 재설정)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더 첨예화할 것이라고 예상함. 즐로빈 소장은 러시아나 미국이 상호 관계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군사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해져 있다며 이 때문에 어떤 정치·외교적 위기에도 쉽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함. 특히 중동 사태와 미국의 유럽 MD 구축 문제 등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함.

● "러, 美에 유럽 MD 관련 법적 보장 계속 요구"(11/8, 연합뉴스)

-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 구축하려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 법적 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리가 8일(현지시간) 밝힘.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미국은 여전히 유럽 MD가 러시아의 핵전력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함. 라브코프 차관은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난 뒤 채택된 합의문에 나토 유럽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이 담겼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올바른 방향의 행보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론 절대 충분치 않다"고 강조함.

- 라브코프는 "미국 MD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이 있으며 우리는 이



를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우리는 최선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적 강제성을 가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러시아가 미국 측에 제안했다 거절당했다는 MD 문제 해결 방안은 나토와 러시아가 함께 공동의 유럽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러시아는 오랫동안 미국과 나토 측에 이 방안을 제안했으나 나토 측은 전략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할 수 없다며 거부함.

- 라브코프는 미국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문서상의 보장이 1972년의 MD 조약처럼 미국의 핵 전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MD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러시아와 나토는 201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MD 문제와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미국이 유럽 MD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란 법적 보장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
- 미국과 나토는 현재 루마니아에 MD 기지, 터키에 MD 운용을 위한 레이다 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는 나토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에 나토 MD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500km의 '이스칸데르' 전술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러시아는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2기 정권이 MD 협상에서 러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보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中日, ASEM서 '센카쿠 격론'(11/6, 연합뉴스)

- 중일 양국이 아시아·유럽회의(ASEM) 회의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까지 거론해가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로 다시 한 번 공개 설전을 벌임.
-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ASEM 지역정세 관련 회의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고하게 평화 정책을 유지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원칙과 정책의 차이를 둘러싼 분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함.
-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도) 반파시즘 전쟁(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나 전후 질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를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함.
- 그러자 노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추가 발언 기회를 신청했고 "애초 (중일) 양국 간 문제에 대해 말할 생각이 없었지만 중국이 거론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겠다"며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이고,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본의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함. 양 외교부장도 지지 않고 추가 발언을 신청,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600년간 댜오위다오를 통치했다"며 "일본의 행동(국유화)은 반파시즘 전쟁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전후 국제 질서와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다시 한 번 뜻을 밝음.

- 양 외교부장은 중국 대표로 참석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일찌감치 귀국하자 대신 지역정세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가 노다 총리와 설전을 벌임. 양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유엔 총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카이로선언(1943년)과 포츠담선언(1945년) 등은 일본이 부당하게 빼앗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를 중국에 돌려주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함. 노다 총리는 회의 후 자국 취재진에게 "중국 측이 센카쿠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이례적인 추가 발언 신청 배경을 설명함.

● 中, 일본의 댜오위다오 '실효지배' 인정한 적 없어(11/8, 인민일보)

- 일본언론에서 중국이 일본 측에 댜오위다오(釣魚島)의 공동 관리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및 부근 해역을 불법적으로 이른바 '실효지배'하는 것을 인정한 적도 없고 또 이를 결단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음.
- 대변인은 또한, 댜오위다오 및 부속 군도 지역은 이전부터 줄곧 중국 고유의 영토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중국은 이전에 열린 중-일 간 댜오위다오 문제 협상에서 상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중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함. 또한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국가 주권 및 영토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日 보수매체, 中 '해양강국' 천명에 민감 반응(11/9, 연합뉴스)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해양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본 보수 매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함.
-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9일자 조간에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 총서기가 한 발언 내용을 상세하게 싣고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견제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풀이함. 요미우리신문은 국제면 기사에서 "후 총서기의 발언으로 볼 때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도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함.
- 산케이신문은 '거짓 선린 외교..창끝은 미·일로'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본심은 센카쿠 갈등을 키우는 것이고 선린외교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일본 정부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침.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8일 정례 회견에서 후 총서기의 해양강국 건설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대국적 견지에서 일중(중일)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동중국해를 평화·우호·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함.

●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10·2%감소, 센카쿠 문제로의 관계 악화가 영향(11/10, 산케이신문)**

- 중국 세관총서가 10일 발표한 무역통계로, 10월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10·2%감소와 9월의 9·6%감소폭에 이어 대폭 마이너스가 되었음.
- 일본 정부에 의한 9월의 센카쿠 제도 국유화 후의 관계 악화로, 자동차 등 일본 제품의 불매의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 것에 가세해 엔고의 영향도 있어, 일본으로부터의 기간 부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짐.
- 대일 수출은 1·1%증가였음. 11·6%증가로 인해 4개월 만에 2자릿수 증가를 회복한 중국의 수출은 전체의 성장을 크게 밀고 있음. 금년 1~10월 누계의 일중 수출입 총액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폭이 확대함. 일중간의 무역은 2010년에 전년대비 30%증가, 11년에 15%증가로 급증했지만, 금년은 전년대비 미달 할 가능성도 있음. 국제사회에서는 일중 관계의 악화가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와 있음.
- 중국 최대의 무역 상대편인 유럽연합(EU)과의 수출입 총액은, 채무 위기의 영향으로 1~10월에 전년 동기비 3·0%감소로 침체됨. 한편으로 대미무역은 9·1%증가로 호조였음. 1~10월의 중국의 무역 총액은 6·3%증가로 정부 연중 목표의 10%를 밀고 있음.

사. 일·러 관계

● **"日 노다 총리 러시아 방문 내년 초로 연기"(11/8, 연합뉴스)**

-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은 러시아와 일본 양측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노다 총리의 올해 방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그의 방문이 이르면 내년 1월 이뤄질 것이라고 전함. 노다 총리는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었음.
-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루(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일본은 옛 소련 시절인 1956년 러시아와 쿠릴열도 2개 섬 반환과 2차 대전 종전을 마무리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맞교환하는 공동선언문에 서



명했으나 이후 4개 섬 일괄 반환을 추진하다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 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러시아의 실효 지배 강해지는 북방 영토·구나시리의 공항, 야간의 이착륙 가능하게(11/9, 산케이신문)**

- 러시아 항공 당국은 9일까지, 북방 영토·구나시리의 (러시아명 유지노 크리리스크) 교외에 있는 멘데레예보 공항에서 8일 밤부터 야간의 이착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이 공항에서는, 북방 영토를 포함한 쿠릴 열도(쿠릴 제도)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는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 근거해 활주로 연장이나 신터미널 건설 등의 개수 공사를 하고 있음. 발광 신호 시스템의 설치에 의해 야간의 이착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함. 러시아 항공 당국은 "항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된다"라고 설명함. 북방 영토의 러시아의 실효 지배가 착실하게 강해지고 있음.

아. 기. 타

● **"美, 한일 군사협력 발전토록 적극 개입할 것"(11/8, 연합뉴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미국 해군 전문가가 주장함.
- 마이클 맥테빗 미 해군분석센터(CNA) 선임연구원(예비역중장)은 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CNA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6회 국제해양안보 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아·태지역 중시 전략의 한 이면에는 한일 양국 군간 지속 가능한 양자관계가 발전하도록 미국이 확실히 개입하겠다는 것이 있다"고 말함. 그는 "중국은 자국의 방위 태세를 향상시킴으로써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안보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최근 결렬된 한일정보협정을 다시 복원시켜 완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에릭 톱슨 CNA 부소장은 이날 '북한의 해상도발'이란 발표문을 통해 "한국은 소형 선박에 탑승한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헬기와 비무장지대나 북한의 취약지역 해안을 정찰할 수 있는 무인폭격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북한군의 움직임을 철저히 분석하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공에서 감시정찰(ISR) 자산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도발 양상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도상 연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톱슨 부소장은 강조함.
- 정호섭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란 발표문에서 "한미 해군은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응징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



원과 한미 해군 장성, 합동군사대학교 장교,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 학자 등 400여명이 참석함. 한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CNA 관계자들은 9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안보공원과 천안함을 견학하고 지휘관 및 참모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 연합 대응방안을 토의함.

● <中당대회> 후진타오, 대만 독립반대 재확인(11/8, 연합뉴스)

- 중국이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는 대만의 독립 추구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확인함.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된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인민은 누구든, 어떤 세력에 의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의 분리 움직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전함. 후 주석은 대신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면 대만의 어떤 정치 세력과도 교류, 대화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임.
- 그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형태의 통일 달성을 양안의 궁극 목표로 제시함. 후 주석은 이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양안 관계의 안정 발전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후 주석은 양안 간 군사안보 분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함.
- 대만 언론은 후 주석의 발언이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적대 관계 해소와 통일이라는 기존 대(對) 대만 정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함. 양안 관계 전문가들은 후진타오가 퇴임하고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기존의 안정적인 양안 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통전위안(童振源) 교수는 "시진핑이 등극하면 중국 내 개혁 등의 문제에 우선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점에서 양안 관계는 앞으로 2년 정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